

북한의 로켓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

전 현 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5일 11시 30분 15초(정부발표)에 ‘은하 2호’ 로켓을 통한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하였다.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은 위성의 궤도진입 실패를, 북한은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공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사실이고, 위성의 궤도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남한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의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임을 내세워 또 다른 UN안보리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후 북한의 로켓발사 정국이 한반도 안보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강화된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지만 국제정치경제적으로 받을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북한이 UN결의를 무시하는 ‘막가파 국가’라는 이미지가 지속될 것이다. 세계 권력지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 하에 있고, 자연스럽게 ‘선전 헤게모니’도 그 장악 하에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불량성’이 순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경제제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성발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다.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유일한 ‘젓줄’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남한의 대북 지원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정치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임을 잘 알고 있을 북한 당국이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령체제의 공고화일 것이다. 북한은 그 어떤 가치보다 수령 및 장군체제를 우선시한다. 유일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심지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아사할 때에도 유일체제 유지를 위해 ‘선금정치’ 대신 ‘선군정치’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자신의 ‘선군정치’ 채택이 얼마나 적절했던가를 반복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금번 위성발사도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이것은 향후에도 선군정치를 지속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위성발사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주궤도에서 위성이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김일성 사망 4년 후, 김정일 정권 공식출범 원년인 1998년 ‘광명성 1호 위성’을 발사하여

꺼져가는 주민들의 충성심과 국가적 자긍심을 회생시킨 바 있다. 물론 이 위성발사는 실패했음에도 북한은 성공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06년 7월 5일에도 북한은 ‘은하 1호’로 추정되는 ‘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지만 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2008년 8월 이후 시작된 김정일 건강 약화에 따른 주민불안감을 해소시키며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로켓발사를 통한 국면전환 시도는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위성발사는 향후 김정일 후계구도와의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번 위성발사는 김정일 후계자가 ‘실무지도’했다는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후계자는 ‘용맹성’을 보여야 하는데 세계 모든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크게’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고 북한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선전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난 해결에 필요한 외화를 ‘단번’에 획득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1998년 8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적 비전으로 내세운 북한은 IT산업을 통한 외화획득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21세기=정보산업시대’, ‘첨단과학기술=컴퓨터 산업’ 등으로 등식화하면서 IT산업의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 고리로 삼았다. 북한은 정보산업지도국 산하에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정보센터(PIC)를 비롯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에 컴퓨터관련 학과를 설치하는 한편 성, 중앙기관 등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북한이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통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우주산업 개발이다. 북한은 이미 이란과 위성발사 기술협력을 수행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로켓발사체를 수출하여 획득할 수 있는 외화는 명확하지 않지만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기에 미국이 3년간 매년 북한에 1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인공위성을 쏘주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생산·배비·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북한의 무기수출액은 약 1억 달러로 추산된다.

셋째,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위기조성전략’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내심 대북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세계사적인 금융위기는 오바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가로막았다. 금융위기는 오바마 정부의 대외문제 우선순위에서 북핵문제를 뒤로 밀치는 결과를 낳게 했다.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서는 북미간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적 과제인 북한으로서 북미 직접대화의 장 마련이 급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이후 북미직접대화의 장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금번에도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쳐야’한다는 소위 ‘위기조성전략’을 북한 지도부가 채택한 것 같다.

향후 북한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김정일 정권 공고화를 위한 각종 인사 및 법제 개정을 단행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2012년 강성대국 개문의 해’를 향한 힘찬 출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로켓발사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UN안보리가 개최되어 북한 제재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다만 중국의 반대가 심해 대북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북한은 이미 UN안보리 회부 시 6자회담을 깨졌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전도 자체가 불투명하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고 남한에서도 대북 제재 확대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보즈워스 미국특사 방북을 통한 북미 직접대화 재개, 남한의 대북 특사파견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 중국 달래기를 위한 김정일의 방중 등 훈풍이 불수도 있을 것이다.

금번 북한의 로켓발사는 그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김정일의 대주민 선군정치 성공 선전, 세계를 향한 북한 과학기술력 과시, '단번도약'을 통한 외화획득 공간 확보, 미국의 대북 관심 유도 등에서 일정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 대북경제제재 확대로 인한 경제난 심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속, 한·미·일 공조 확대 등 많은 것을 잃었고, 이런 것들은 향후 김정일 체제는 물론 김정일 후계체제에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